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원자력) 미국 원자력 산업 부흥 및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고, 미국 원자력 산업 부흥 조치 발표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미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제동, 판결 하루만에 효력 중지 4
- (수출통제)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화학물질 등 대중 수출 제한 5
- (경제) 미국 1분기 GDP 0.2% 감소...소비 둔화 및 수입 급증 영향 6

🏛️ 의회법안 동향

- 의회 특이 동향 없음(휴회기간) 6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7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8

📅 워싱턴 D.C. 주요일정

5.30(금)	• 4월 개인소비지출(PCE index)
6.2(월)	• 5월 S&P 최종 미 생산 구매관리자지수(S&P final U.S. manufacturing PMI)
6.3(화)	• 5월 채용 정보(Job openings)
6.4(수)	• 5월 S&P 최종 미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S&P final U.S. services PMI)

(원자력) 미국 원자력 산업 부흥 및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개 요

□ 트럼프 대통령, 원자력 산업의 활성화와 전면적 혁신,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 행정명령 발표(5.23)

-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고 포괄적 원자력 전략 기반 구축을 위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
 - (1)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Reinvigorates the Nuclear Industrial Base)
 - (2) 에너지부 내 원자로 테스트 개혁 (Streamlines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OE)
 - (3)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4)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 (Deploys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4배(400GW)로 확대, △글로벌 원자력 기술 분야 미국의 리더십 회복, △국가 에너지 자립, 경제 성장 및 안보 이익 확보 등 미국 원전 산업 부흥을 위한 포괄적 원자력 전략의 실행 기반 마련이 목표

2. 행정명령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원자력·화석연료·신기술을 포함하는 에너지 독립 전략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무역 개선, 외교적 영향력 강화 도모 강조

(1)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Reinvigorates the Nuclear Industrial Base)

- (목표) 미국의 글로벌 산업, 디지털, 경제적 주도권 확보, 에너지 자립 달성 및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기술 에너지 생산 및 운영 촉진

- 에너지부 장관은 ① 핵연료폐기물 관리, 상업적 재활용 정책 및 핵폐기물 활용 방안에 대한 권고안 보고, ② 국내 우라늄 변환·농축 능력 확대 계획 수립, ③ 잉여 플루토늄을 첨단 원자로 연료로 전환 프로그램 추진, ④ 원자력 산업 컨소시엄 설립 지원 및 국내 연료 공급망 구축
- (주요 조치) △2030년까지 5GW 전력 공급 및 원자로 10기 신설 우선 추진 △원자력규제위원회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절차 개혁, △우라늄 채굴, 전환, 농축 및 재활용 능력 강화, △원자력 인력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폐쇄 발전소 재가동, 미완성 프로젝트 완료, 신규 원자로 건설 지원, △핵연료 관리 개선 및 핵물질 재활용·재처리 촉진 등

(2) 에너지부 내 원자로 테스트 개혁 (Streamlines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OE)

- (목표) 국립연구소 원자로 테스트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에 있어 에너지부 권한 강화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주요 조치) 에너지부 장관은 △첨단 원자로 테스트 기준·절차 신속화 지침 마련, △첨단 원자로 심사·승인·배치 신속화를 위해 규정·지침·절차 개정, △에너지부 계약하에 외부 원자로 3기 시범 구축 추진('26년 7월 4일까지 임계 도달 목표), △환경 심사 등 내부 절차 간소화 또는 생략 등

(3)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목표) 외국 기술 의존도 축소, 규제 완화, 국내 원자력 산업 지원, 미국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NRC의 규제·조직·문화 전반 대대적 개혁을 지시
- (주요 조치) △NRC 규정·지침 전면 개정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원자로의 허가 기한(신규(18개월), 기존(12개월)) 도입, △과학 기반 방사선 기준 및 환경정책법 (NEPA) 규정 개정, △국방부·에너지부의 안전성 검증 원자로 설계 신속 승인, △첨단 원자로 신속·대량 인허가 체계 구축, △NRC 조직·문화 개혁 및 경제·안보적 가치 평가 강화, △NRC의 인허가 신속 처리·혁신 기술 도입 촉진 등

(4)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확대 (Deploys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 (목표) 국가안보 강화, 인공지능 인프라 전력 기반 구축, 민간 혁신 촉진 및 투자 유치,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 강화로 군사력, AI, 에너지, 민간 혁신, 외교 등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 확보
- (주요 조치) △3년 내 미군 기지에 첨단 원자로 건설 및 가동, △ AI 데이터센터·국방시설 등 주요 인프라에 첨단 원자로 전력 공급(30개월 내 배치), △국방·에너지부 등 군 기지 내 원자로 운영을 위한 입법·규제 개선 권고, △민간 AI 원자로 프로젝트에 고농축 저농도 우라늄* 20톤 제공, △연방부지 내 민간 주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제조 설비 구축 지원 및 환경 규제 간소화 등
- * HALEU(고농축 저농도 우라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효율적인 차세대 원자로 연료로, 미국의 에너지·군사·AI 전략에서 핵심 자원으로 부상

□ 현지 반응

-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부흥책에 대한 원자력 업계의 낙관론 및 정책 실현 가능성, 환경 영향·안전성에 대한 우려 혼재
 -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행정명령을 ‘대규모 산업 부양책’이자 ‘규제 완화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과 안전·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보도
 - 원자력 업계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개혁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규제 확실성, 공급망 보안,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중요성 강조
 - 원전 안전 옹호 단체들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독립성 약화 및 에너지부의 인력 감축이 원전 산업 발전과 공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애틀랜틱 카운슬,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찬 목표가 비용, 건설 지연, 차세대 원자로 설계 부족 등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회의적 시각 표명
 - 기술 정보 혁신 재단(ITIF),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지원, 산업 전반의 포괄적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 백악관 팩트시트(5.23 등), 애틀랜틱 카운슬(5.25), ITIF(5.27), 외 현지 언론 취합

(관세) 미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제동, 판결 하루만에 효력 중지

• (개요) 항소법원,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5.29 16:00 기준)

- 어제의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 일시 집행정지 결정
- * 6월 5일까지 제소 기업의 의견 요청 및 6월 9일까지 법무부 소명 자료 제출 명령

• (경과) 연방법원 상호관세 무효 및 시행금지 평결(5.28) → 항소법원 일시복원 결정(5.29)

-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법률상 수입 규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 해당 행정명령의 무효 판결(5.28)
- * 미 행정부에 10일 이내 ▲대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10% 보편관세, ▲60여 개국 대상 상호관세 등 IEEPA 기반 관세 조치 등 철회를 위한 행정절차 개시를 명령

【미 국제무역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 IEEPA 제1702(b)(1)조는 대통령에게 수입규제(regulate importation)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본 법은 금융거래 제한 및 자산 동결 등 비상시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관세 부과와 같은 일반적 통상 조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 해당 관세 조치가 구체적 사실 판단(tailored findings)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포괄적 관세 부과는 선언된 국가비상사태와의 인과관계(nexus)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 해당 관세 조치들이 IEEPA에 근거한 초과 권한 행사(ultra vires)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납부된 관세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환급될 수 있다고 명시

-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하여 긴급 제출한 효력 정지 요청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여 관세 철회 즉각 이행에서 유예되었으며, 판결 전까지 관세 징수 유지 가능(5.29)

• (반응) 연방법원, 별도 기소건에 대해 유사 평결, 그러나 품목별 관세는 유지 전망

- D.C. 연방법원 콘트레라스 판사는 일리노이주 소재 장난감 수입업체의 유사 기소건에 대해 IEEPA가 해당 기업에게서 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평결(5.29)
-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통상법 제301조 기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본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될 예정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셋 위원장은 “해당 관세는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입장 표명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미 국제무역법원(5.28), 폴리τικο(5.28), 블룸버그(5.29)

(수출통제)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화학물질 등 대중 수출 제한

• (개요) 미국, 전략적 품목 중심 규제 조치 시행으로 대중 수출 규제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에 대해 라이선스 없이 대중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며, 일부 공급업체 기존 수출 라이선스 또한 취소
- 로이터 통신은 본 조치는 중국의 핵심 산업 필수 제품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공급망 주요 거점 차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
- 상무부는 대중 수출 허가 요청에 대해 건별 심사를 진행 예정이며, 본 조치가 전면적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언론에서는 시사

• (상세)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확대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 전망

- 본 조치 영향 대상에는 반도체용 설계 소프트웨어, 관련 화학물질, 부탄 및 에탄 등 가스류, 공작 기계, 항공 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

- 반도체용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일부 기업*은 중국에 제품 공급을 위해 향후 별도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지서 수령(5.23)

* 케이던스(Cadence), 시놉시스(Synopsys), 지멘스(Siemens) 자회사 지멘스 EDA 등이 포함

-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은 미국산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기에, 접근 제한 시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언론에서 분석

* 케이던스, 시놉시스, 지멘스 자회사 멘토 그래픽스(Mentor Graphics)가 중국 시장의 70% 이상 점유

**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소프트웨어 사용 중인 중국 기업으로는 브라이트 세미컨덕터(Brite Semiconductor), 지에리 반도체(Zhuhai Jieli), 베리실리콘(VeriSilicon) 등이 존재

- 중국 외교부는 본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워싱턴이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경현
■ 자료원	로이터(5.29)

(경제) 미국 1분기 GDP 0.2% 감소...소비 둔화 및 수입 급증 영향

- (개요) 2025년 1분기 미국 실질 GDP가 전기 대비 연율 -0.2%로 집계(잠정치), 2022년 이후 첫 분기 마이너스 성장 기록
 - GDP 감소는 소비 증가세 둔화(1.2%, 최근 2년 내 최저)와 트럼프발 관세에 따른 수입 급증(42.6%↑, GDP에서 약 5%p 차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 서비스 소비(의료·주택 등)는 1.1%p 기여했으나 내구재(자동차 등)는 0.11%p로 급감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기업들이 조기 수입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
- (상세) 현지, 수입 급증과 소비 둔화가 성장을 하락 원인, 2분기에는 반등 기대감
 - 기업 설비투자(10.3%↑)와 재고 증가, 수출 확대 등이 일부 하락폭을 상쇄했으나 정부 지출도 4.6% 감소해 성장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 분석
 - 최종 민간수요(소비 및 고정투자)는 2.5%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2.4%↑)에 비해 둔화
 - 현지 언론은 백악관은 일부 관세 유예·완화로 경기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소비·투자 흐름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보도
 -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재정정책, 소비 회복 여부가 향후 성장 모멘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2분기에는 재고 조정 효과나 투자 확대 등 반등 기대감 관심
 - * 3월 개인소비지출(PCE) 0.7% 증가, 완만한 회복 조짐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블룸버그(5.29)

의회법안 동향

* 특이 동향 없음(휴회기간)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 Administration Races to Stop Bombshell Tariff Ruling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위법 판정” 번복에 총력)
	지난 수요일, 연방통상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 하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10일 내 기존 행정명령 취소 명령을 내리라 판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및 긴급 집행정지 신청
The Washington Post	Trump meets with Fed chief for first time since recent criticism (트럼프, 최근 비판 후 처음으로 연준 의장과 만나...)
	트럼프와 파월 의장 간 1대1 만남은 이번 임기 시작 후 처음. 연준은 성명문에서 오직 경제지표만으로 향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 밝혀. 백악관은 금리유지가 실책이라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밝혀
The New York Times	With Tariffs in Limbo, U.S. Trading Partners React Cautiously (갈팡지팡 관세정책, 조심스러운 교역국가들)
	미국의 주요 교역 국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행정부가 다른 수단으로 관세 부과할 가능성도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 특정 관세는 효력이 없기 때문
CNN	Stocks waver after a federal court halted Trump's tariffs (법원의 트럼프 관세 제동에... 요동치는 미 증시)
	엔비디아의 실적발표와 관세부과 정지 명령에 힘입어 증시 초반엔 상승했으나 백악관의 즉각 항소 등으로 무역전쟁의 향방이 미궁에 빠지자 하락세로 반전
USA Today	Second federal court blocks Trump tariffs, this time for Illinois toy importers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제동 두 번째 판결 사례)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5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원고인 일리노이 기업들에게서 관세 징수 중지를 명령

* 미국 동부 시간 5월 29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14	약가 인하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5월
US25-13	美 정기선 해운산업의 경제적 영향 및 항만료 추정 비용 분석 주요 내용	2025.05월
US25-12	2026 회계연도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5월
US25-11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4월
US25-10	美 USTR의 중국 조선업 무역법 301조 권고 조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4월
US25-09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5.04월
US25-08	‘미국 우선 투자 정책’ 대통령 각서 발표 및 주요 내용	2025.04월
US25-07	미일 정상회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 강화	2025.02월
US25-06	美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부과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5	美 하원에 발의된 ‘미국 상호무역법안’ 상세 내용 및 시사점	2025.02월
US25-04	미 하원,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	2025.02월
US25-03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2	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 정책 전환과 주요 일정	2025.02월
US25-01	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	2025.01월
US24-47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글로벌 무역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6	미 2050 원자력 3배 확대 로드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4.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2 (2025.5.13.)		
코인시-21 (2025.2.8.)		

문의	이메일	전화
	seogil.chang@kotra.or.kr	+1) 202-857-7919
	jwshim@kotra.or.kr	